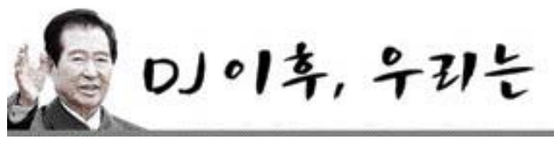
자력갱생, 변화·혁신만이 살 길



❹ 호남정치권의 장래

40여년 일당 독주 구도, 경쟁 구도로
정치적 비전 제시 못하면 지역민 외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서거는 지역 정치권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DJ의 우산'에 안주해왔던 지역 정치권에 '도전과 응전'을 통한 미래의 정치적 비전 창출이라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이 어떻게 변모하느냐에 따라 호남의 미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지역 정치권에 '정신적 구심점' 상실이라는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호남의 '한'(恨)을 넘어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난 40여년 동안 지역 정치권을 사실상 지배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지역 정치권은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진공'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김 전 대통령의 공백을 해소할 만한 정치적 리더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사실상 민주당 일당 체제의 지역 정치 구도에도 변화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지역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DJ의 입김이 사라짐에 따라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과의 경쟁 구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미되면 한나라당의 진입 등 지역 정치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DJ 서거는 정치적으로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지역 정치구도의 지각 변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지역 정치권에 '도전과 응전'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김 전 대통령 자신이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정치적 리더십을 쌓아왔고 이를 통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DJ의 영향력 밑에 안주했던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유권자가 인정해주는 '실력'과 '신뢰'라는 정치적 자산 확보 없이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변화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상당수가 2선 퇴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효석, 박주선, 박지원 의원 등이 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인기 의원 등도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가며 지역 정치권의 세력화를 도모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중진 의원은 "정치적 구심점이었던 DJ의 서거로 인해 지역 정치권은 생존을 위한 정치적 연대와 도전을 모색할 것"이라며 "결국, DJ의 서거는 지역 정치권에 자력갱생의 장을 열어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끝〉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당 지도부와 전남 지역 의원 등 20여명과 25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방문, 김 전 대통령의 생가에 마련된 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삼우제

민주당 하의도 생가서 유지 계승 추도행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삼우제(三虞祭)가 열린 25일 민주당은 DJ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에서 추도행사를 가졌다.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마포구 서교동성당 윤일선 주임신부의 집전으로 국립 서울 현충원 김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진행된 이날 삼우제에는 이희호 여사와 홍일·홍업·홍걸씨 등 세 아들 내외를 비롯한 유가족과 비서진, 김대중 정부 당시 각료,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여사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으며 차남 홍업씨도 눈물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 측은 이 여사의 뜻에 따라 49재는 치르지 않기로 했다.

같은 시간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분향소에서도 삼우제가 열렸다. 이 삼우제에는 광주·전남 추모위원장인 지선 스님 등 추모위원회 관계자와 민주당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서거를 추모했다.

삼우제가 열린 이날 민주당은 하의도를 방문, DJ 생가에서 추도행사를 갖고 유지 계승을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 송영길·김민석·박주선·김진표·안희정·장상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비서실장, 노영민 대변인,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이낙연·주승용·이종걸·백재현·이윤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교동-상도동계 연대하나

DJ 서거 계기 화합 급물살…양계파 전·현 의원들 정치 복귀 활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의 동교동계와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상도동계가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우선 양 계파는 DJ 서거를 계기로 화합·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YS는 26일 저녁 서울시내의 한 음식점으로 동교동계 전·현직 의원을 초청, 상도동계 20여명의 인사와 함께 만찬을 할 계획이다. 이 화합의 모임은 그러나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안 된 시점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앞서나간다는 일부의 비판에 직면, 불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교동계 관계자는 25일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일(26일) 가봐야 모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상도동계와 화합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양 계파 소속 전·현직 의원들의 정치적 행보도 활발해질 조짐이다. 특히 동교동계의 경우 대부분의 소속 정치인들이 정계의 뒤안길에 머물러 왔으나 이번 상도동계와의 화합을 계기로 지역주의 극복을 내세워 정계 복귀를 꿈꾸고 있다.

한화갑 전 대표는 최근 민주당 입당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8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광주 북구갑에 출마했던 한 전 대표는 낙선 이후 복당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설훈 전 의원은 사고 지구당인 부천 원미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상태고, 고흥에 공을 들여오고 있는 장성민 전 의원은 서울 금천에서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전 의원도 전북 정읍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특히 동교동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DJ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의사를 보이는 등 정계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동교동계를 무시할 수 없어 향후 민주당의 행보와 맞물려 주목을 끌고 있다.

물론 동교동계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측근 정치의 폐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반해 상도동계는 현재도 정권에 몸 담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친박 진영의 좌장격이고, 이성헌 의원도 제1사무부총장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다시 정치 전면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보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창당 작업 계속"

천호선 前 대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유지에도 불구, 친노신당파는 창당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친노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천호선 전 대변인은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가능하다면 12월 달에 창당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천 전 대변인은 민주당 중심의 통합에 대해 "민주당은 최악의 상태며 국민 전체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평가한 뒤 "항상 민주당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앞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화해 물꼬 대통령이 터야"

강운태의원, 李대통령에 서한문

민주당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은 25일 "지금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화해를 위한 7가지 조치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의 재협상 ▲부자 감세의 철회와 4대강 사업의 축소 ▲영남 편중과 호남 소외의 인사차별 시정 ▲'5+2 광역경제권'을 '5+3'으로 수정 ▲용산참사 해결과 집회·표현의 자유 보호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개선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화합과 통합을 위한 7가지의 당면 조치사항을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자 감세 구멍 메우기"

이용섭의원, 세제개편 혹평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25일 발표된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90조원에 이르는 세수 재원 확보를 위한 고육책이며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냉장고, 에어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채권 및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등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원 부족을 중산층으로부터 거두겠다는 행정편의적이고 무리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자 감세로 인해 별다른 세수 증대 효과도 없어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 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